전주 폭염대책 방안 마련 고심

완산구, 전국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 김광수, TF 구성 제안

최근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별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완산구가 폭염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3일 전주시의 폭염 취약성 극복과 중장기적 폭염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참여하는 '전주 폭염취약성 극복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서 공개한 폭염 취약성 지수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과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 취약성 정도를 분석하여 지수화한 것"이라며 "특히 총인구수 대상 폭염지수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로 분석된 점은 결국 인구 대비 소방서 인력 및 응급의료시설과 인력이 적어 폭염에 대한 사고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총인구 대상 폭염지수 분석 결과, 전주시 완산구의 지수값은 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덕진구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폭염취약성 지수에서 0.5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완산구의 경우 높은 평균온도를 의미하는 기후노출은 0.5로 큰 반면, 인구당 소방서 인력과 응급의료시설 등 기후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응능력은 0.03으로 나타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역대급 무더위 경보에는 역대급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5월 20일부터 확산한 폭염경보 속에 지난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2,355명의 온열질환자 발생했고, 이중 29명이 사망한 만큼 전주의 폭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 국회의원실과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폭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주 폭염 취약성 극복 TF'를 구성해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폭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임을 인식하여 국가 재난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전주의 폭염취약성 극복과 폭염대응 사업모델 발굴 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첫 소환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드루킹 대질 신문 가능성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 조사한다.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김 지사에 대한 첫 조사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지사 변호인인 '동명'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과 만나 일정을 조율했다. 김 지사 측에서 6일에 소환해줄 것을 특검에 건의했고, 협의 끝에 조사 일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범으로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김 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팀은 소환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김 지사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질문할 내용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만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 조사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 김 지사 조사를 맡을 수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득신·김대호 등 각각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특별검사보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소환 조사 과정에서 대질 신문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김 지사 관사·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공범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요청으로 지방선거 등 정치 관련 댓글 조작 범행을 벌였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 전반을 김 지사에게 추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 입회하에 특검 수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정배 "기무사 논란, 군내 사조직 철저 조사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문건 논란과 관련해 "쿠데타 모의로 봐야하는 명백한 정황들이 있다"며 육사 출신들의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논평을 내어 "이미 알려졌듯 이번 계엄계획은 군의 지휘계통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의 요직에 육사 출신을 배치했다"며 "뿐만 아니라 계엄 계획에 관여한 자들도 실행단계에서 무장력을 동원할 가용 병력으로 표시된 지휘관들도 예외없이 육사 출신"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검토' 차원이었다면 지역 계엄 사령부는 지역부대들로 편성돼야한다. 그러나 합참의 계엄편람 체계와 달리 이번 계획엔 각 지역에 수도권 부대와 특전사가 짝지어 투입되도록 해놓았다"며 "예컨대 '전라도엔 26사단과 특전사 11여단', '경상도엔 수기사와 특전사 7여단'과 같은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자체나 지역부대가 계엄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화기로 무장한 수도권 부대 및 공수부대로 초기 제압을 노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쿠데타 모의를 하면서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출신을 배제한 이유가 육군사관학교 자체의 성격 때문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와 관련 '누님회',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모임들이 그 배경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기무사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2의 쿠데타 모의가 재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뉴시스

당권주자 유성엽 vs 정동영 감정다툼 가열

유 "신자유주의? 정의당 대표나 할 만한 소리" 반박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자신에게 신자유주의 망령이 들었다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그런 이야기는 정의당 대표나 할 만한 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1,000조의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인상으로 국민세금을 가지고 빚잔치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부패하고 비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경제공부를 더 해야할 것"이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꼬집었다.

또한 유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설 쌓여온 경제적폐로 인해 세계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률은 감소하고 실업률과 물가는 높아지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만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한해 100조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 스타트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스레 늘어 지금같이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연루 의혹 도마위

바른미래 오신환 "국민들 의구심 증폭… 수사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사의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방송 보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들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거취 문제가 거론된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 후보들의 이해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김진표 후보의 경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해철 의원 그룹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 지사와 각을 세웠던 전 의원의 지지그룹 표심에는 당연히 이 지사 탈당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이 지사와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이해찬 후보의 경우 반대 그룹에서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